

# 국내외 활동 및 기사



# 재외동포 정책 공청회

## 이오영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이하 미주 총연)장 발표 요지.

지난 2월 말 경, 주최측(국회 안보 통일포럼)에서 이오영 회장을 초청 의뢰한 Subject 는 "거주 지역 한인 사회 현황과 동포 정책"으로 이 회장이 한인사회 봉사경험을 바탕으로 급히 작성하여 제출한 준비물이 인쇄되어 있었으나, 당시 공청회의 현장 분위기가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 동포법)' 개정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각자 발표를 10 분 이내로 하라는 사회자의 제의가 있었을 뿐 아니라 미주한인 사회 현황은 이미 여러 경로로 밝혀져 있는 사항 인고로 공청회장에선 생략하겠다고 전제하고,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미주 한인 동포들의 최대 관심사인 "재외 동포 법' 헌법 불 합치 판정에 대한 대응책에 대한 미주 총연 의 입장을 중점적으로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1.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가 1983 년부터 계속 부단하게 모국정부와 정당대표에게 동포청 설치 및 2중국적 인정을 건의한바 있었으며, 특히 1987년 10 월 헌법 개정 당시 재외 동포 법적 보호를 위한 헌법에 명시하도록 건의한바, 대한민국 헌법 제 2 조에 "재외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를 "재외 국민은 국가가 보호할 의무가 있다". 라고 적극적인 보호의지를 담은 조항으로 개정했다고는 하나, 이는 한국혈통을 가진 외국시민권을 가진 동포를 고려하지 않은 조항이었다. 20 여 년간 지속적으로 미주동포들의 재외동포 전담기구인 동포청 설립을 촉구하는 끊임없는 주장에 의거 1997년 10 월 30 일 김영삼 대통령 정권 말 동포청 대

신 동포 재단이 설립되었고, 김대중 대통령이 2 중 국적을 선거공약으로 하여, 이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진통 끝에 2 중국적 대신 재외 동포 법을 제정하였으나, 재외동포 대표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고 재외 동포의 범위를 1948년 정부 수립이후 재외로 이주한 자로 한정함으로, 중국 동포들의 헌법재판소에 제소함에 따라 2001년 11 월 29 일 평등권 침해라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고, 이를 2003년 12 월 31 일 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이오영 총회장은 '관련부처'(국회 및 정부)가 2003년 12 월 이전까지 헌법 불 합치 요소를 제거하고 혈통주의에 입각하여 개정 존속시킴으로써 재외 동포 누구나 균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외 동포 법을 개정 존속 시켜야 한다는 것이 미주 총연의 입장임을 강조하였다.

2. 그리고 동포 법 개정으로 인한 또 다른 위험 요소(?) 및 중국과 국제 분쟁 마찰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정보다는 재외 동포를 재외국민과 외국인으로 확실하게 구별하여 재외 국민은 재외 국민 법으로,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는 외국인 처우에 관한 개별 법으로 보호하여 외교적 마찰을 없애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찬성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3. 부가해서, 현존하는 재외 동포 법이 이중국적 제도가 아닌, 재외 동포를 민족 자산으로 하여 국

가 발전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으로

1) 중국이 중국 국익에 입각하여 반대하는 논리를 모국이 무조건 받아드리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보다 적극적인 외교로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보며.

2) 본 재외 동포 법이 근본적으로 위헌 판결이 아니고, 헌법 불합치인 고로 불합치 요소를 없애고 원칙적으로 재외동포 모두에게 혜택을 주되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은 모국 실정에 맞게 세칙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당부처 전문인으로 하여금 연구, 검토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으로 인한 외교적인 문제점 그 자체 때문에 골치가 아파 아예 개정하지 않고 힘들게 제정된 현존하는 재외 동포 법(개별 법으로 대우하겠다는 명분을

들어)을 폐지하겠다는 발상에 대해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으며,

3) 주권 국가에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내에서 타민족에 대한 입국 및 경제 활동의 차별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세계 각국의 입법 추세임에도 반드시 세계 만민이 동등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국제법 기본 정신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이를 확대 해석하는 논리는 현실적으로 부당함으로 재고해야 하며, 이를 재외동포 거주 국이나 자국의 형편에 따라 세칙으로 적절히 제한, 조정하는 것은 위헌이 아님을 주장했다.



재외동포 정책 공청회 회의장 모습

한편 이오영 회장은 본 "재외동포 법" 개정에 관한 법률적 대응방안에 관하여 중국동포를 대변하여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한 이석연 변호사에게 문의한바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았다.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이오영 회장님께

200만에 가까운 미주지역 한인동포들의 지위향상과 권익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회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회장님의 활동상황과 그리고 저에게 요청하신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저 역시 미주동포들을 비롯한 해외동포들의 국내에서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제가 "재외동포 법"에 대하여 헌법 소원을 제기한 목적은 재외동포에게 국내에서의 출입국과 경제활동 등에 혜택을 부여 하는 것은 국가의 헌법적 의무라는 전제하에 모든 해외동포들을 차별 없이 대우하라는 헌법의 취지를 살리고자 함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같은 취지로 위 법에 대하여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위 법에 대한 판단 이후 국내의 분위기는 외무부를 필두로 많은 학자, 언론 등에서 위 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 같아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교민 청을 신설하여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외교 마찰 등을 이유로 위 법의 폐지한다는 것은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신뢰도의 상실로 인한 재외동포 사회의 반발은 물론 헌법적으로도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봅니다. 즉 위 법을 폐지 할 경우 위 법에 위해서 혜택을 받았던 재외동포들의 신뢰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되며, 이 신뢰이익은 헌법수권에 의해서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입니다. 때문에 외교마찰 또는 중국동포의 국내유입으로 인한 노동시장 불안 등 검증되지 않은 이유를 내세워 법적으로 명백히 보호된 재외동포들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위반 즉 기본권을 제한 또는 박탈하면서 요구되는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피해의 최소 성 등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조치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법을 폐지하는 것은 당연히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생각합니다.

회장님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위 법의 폐지를 막기 위한 여론형성의 일환으로 치밀한 법리와 논리에 입각한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위법의 폐지가 법리적, 현실적으로 부당하다는 운동을 조직적으로 벌릴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안책 없이 폐지되었을 경우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헌법소원의 제기는 당연하겠지만 우선 위 첫 번째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난 4.12 서울대학교 "공이 인권 법 센터" 주관으로 서울대학교 에서 "재외동포법의 재

검토" 라는 주제로 외교부, 학계, 정계 등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저는 그 자리에 토론자료로 참석하여 위 법 폐지의 부당한 위법성을 강하게 주장한바 있습니다. 그날 세미나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폐지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말씀은 다음기회에 나누기로 하고 이만 줄입니다. 부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2002. 4. 18

변호사 (전 경실련 사무총장) 이 석 연 드림



재외동포법 개정에 관해 이석연 변호사와 대책을 숙의하고 있다.

## 세계 한상대회 참석

지난 2002년 10월 9일-12일, 서울 롯데 호텔에서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병현) 주최로 "제1차 세계 한상대회"가 개최되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상업에 종사하는 한인 동포들을 하나로 엮어 동일 업종간의 활로를 개척하고, 구매력을 증진시켜 동포 각 개인의 이익의 극대화는 물론 조국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취지로 개최된 이번 한상 대회는, 지난 7월 9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세계 한인회장 대회에서 이의 필요성을 토의하고 결의문을 채택, 이를 재외동포 사회에 홍보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한 바 있었다.

이 날 대회에는 상업에 종사하는 재외동포 600여명, 국내 경제인 200여명 등 900여명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국내·외 국민과 동포들은 이 대회를 통하여 중국의 화상대회를 능가하는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오영 총 회장은 대회 첫 날, 대한민국 전국 경제인 연합회 김각중 회장 환영 만찬에서 답사 겸 축사를 했다. 이 날 축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계한상대회에서 축사를 하는 모습

## 김각중 전경련 회장 환영 만찬에 대한 축사 (답사)

방금 소개받은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회장 이오영입니다.

존경하는 김각중 전경련 회장님! 세계상공인협회 이사장이신 김덕룡 의원님, 권병현 재외 동포 재단 이사장님, 임창빈 미주상공인협회장님 그리고 5대양 6대주 지구촌 방방곡곡에서 오늘 한상 대회를 찾아오신 경제인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뵈울 수 있어 반가운 마음 금 할 길이 없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대표하여 환영 만찬에 답사를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공사 다망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위하여 만찬을 베풀어주신 전경련 김각중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경제는 지난 9.11 국제 테러 사태 이후, 경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미국이 이라크의 무장해제를 UN에 강력히 요구하면서 후세인의 퇴진을 압박하는 군사 행동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실정에서 경제 불안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김각중 전경련 회장님을 위시하여 모국의 경제계에서는 국내 경제 활성화와 경제 강국의 진입을 위하여 다각도로 검토 실천에 옮기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래 전부터 권병현 재외 동포 재단 이사장께서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외 동포 600만을 Net Work 하여 민족의 자산가치를 높이고, 국내외에서 사업에 종사하는 엄청난 숫자의 경제인 동포를 “한상대회”라는 이름 하에 한데 모이게 하여, Net-Work 를 구축하게 함으로서, 한민족 동포 경제인간에 교역의 활로를 넓히고, 한 민족이란 민족의 자긍심과 동질성을 통하여 상거래의 신뢰도를 증진시켜, 당사자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물론, 국가 경쟁력을 높여 궁극적으로 경제활성화를 통한 국력 부강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추진해야겠다는 선구자적인 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의 중국이 이미 "화상 대회라는 화교 정책"을 통하여 급성장하고 있는 오늘의 중국 경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은 월드컵 4강의 신화 창조를 통해 민족의 단합된 열기와 애국심을 확인한바 있으며, 우리민족이 무한한 가능성을 이룰 수 있는 성숙된 저력 있는 문화 민족으로서 월드컵 4강을 이룩한 신화창조의 열기와 단결된 애국심을 민족 상호간의 경제 활로 개척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경제 4강의 신화”를 창출해 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주제넘은 일이 될지 모르겠으나, 오늘 이 자리에서 당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의 제 1차 “한상 대회”가 단순한 만남의 장으로 평가 절하 되는 “실천 없는 연례 대회”가 되지 않도록, 이모임을 통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찾아 교역의 폭을 넓히시고, 새로운 지역과 국가에 판로를 개척, 그 여력을 전 세계로 확산하여 경제 강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실천하는 한상 대회”로 값진 만남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만찬을 준비하여 주신 김각중 전경련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단상을 내려가기 전에 건배를 제의 하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는" 하고 제창하면 여러분은 "할 수 있다" 로 힘차게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주 총연 대표, 대구 지하철 희생자 빈소 방문, 헌화

2003년 2월 28일 9:00 am, 이오영 회장과 이준성 이사장은 대구 지하철 화재로 희생된 영령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항공편으로 대구로 내려가 대구 시민회관에 마련된 빈소를 방문, 신동수 부시장을 만나 200만 재미 한인들을 대신하여 심심한 애도와 위로와 조의금 조로 한화 1백 만원을 전하고, 헌화 및 분향을 하고 돌아왔다.

신동수 부시장은 방문 당시 사망자가 195명이라고 밝히고, 500여명의 실종 신고가 있는 현시점에서 앞으로 사망자는 더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으며, 사망자 판단에 문제점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었다.



이오영 회장, 대구 지하철 희생자에게 분향하고 있다.



## 재외동포정책 포럼에서도 재외동포법 존속 개정 촉구

2003년 2월 25일

재외 동포정책 포럼에서

- 1) 미주 총연 「재외동포법, 조속 개정 촉구……」
- 2) 조웅규 의원 「동포 단일 기본법 제정 및 재외동포법 혈통주의의 정신에 의한 위헌 요소 개정」 제의로 공감대 형성.

지난 2월 25일 오후 5시, 소공동 롯데 호텔에서 제 16대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세계 각국 한인 대표급 인사 300여 인사가 모인 가운데, 새 정부에 건의할 재외동포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오영 회장은, 축사와 인사에서 「재외동포법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후, 2003년 12

월 31일까지 반드시 개정, 존속 되어야 함에도 방치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오늘 중지를 다시 모아 재외 동포법은, 혈통주의에 입각한 조속한 개정을 관계 기관에 강력히 건의하자.」고 주장하고, 「재미 동포가 결집된 힘을 바탕으로 민족의 정체성과 민족의 위상을 제고하여 문화 전수를 할 수 있는 한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조속 국가에서 한민족의 중심 단체로 조직의 체계화가 될 수 있도록 자구적인 노력과 모국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하며, 재외동포 대표가 참석하는 재외동포 정책 위원회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재외 동포정책 포럼에서 총회장의 연설모습

또한 미국 측의 신필영 전 총 회장은 발표에서 지난 십수년 동안 "미주 한인들이 다방면으로 모국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전제하고, 미주 한인 사회는 기존의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를 중심으로 단합하여 발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모국 정부의 열린 국가와 미래 지향적인 정책적 배려가 시급하다. 재외동포정책 수립은 재외동포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날 국회 외교 분과위원회 간사 조웅규 의원은 "현재 산만하게 분포되어 있는 관계 법률을 하나로 묶는 동포 단일 기본법 제정 및 문제의 재외 동포

법은 혈통주의의 정신에 입각한 개정안을 준비해 놓고, 공청회 과정을 거쳐 국회에 법안 상정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여 참석자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

한편, 이 날 토의되어 결정된 8 개 사항과 미주 총연 구심화를 위한 정책적 배려를 포함, 9 개항을 민주당 정대철 대표최고위원,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권한대행을 방문하여 당 차원과 국회 차원의 협조를 부탁하고, 권병현 이사장을 통해 정부 당국에 건의하였다.



재외동포정책 토론회에서 이오영 회장 의견개진